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의 의미와 후속 과제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외부용역업체 노동자 김모군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여가 지나서야 이루어진 30년 만의 전면개정안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된 노동개념의 확대에 맞춰서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앱을 기반으로 한 배달종사자) 등이 그 대상이다. 둘째, **사업주(기업) 및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사업주 및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장했다.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5년 이내 사망사고 중복발생시 최초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청노동자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셋째, **수은·납·카드뮴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일시·간헐적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용).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물질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넷째,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고 등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분야의 산재예방조치를 강화**했다. 건설공사 계획단계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여부 등 확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설치·해체작업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두는 등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다섯째, **산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의 기준**을 높였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시켰고, 위험성 평가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 참여를 명시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하는 차원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이때에도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으로 안전한 사업장,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는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를 위한 장소지정,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 사항 등 **후속 시행령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근로감독 및 안전보건감독**을 상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업과 사업주의 인식변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과정에서 기업측이 주장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은 기업의 의무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공기업 주도의 지속·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그리고 도급계약의 엄격한 제한을 위한 제도정비와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I.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공포

### □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다시 대두
    - 2018년 11월 1일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안 발의
  - 정부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
    -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플랫폼 노동자),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등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 및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 \*산안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 산안법이 근로기준법의 부속법규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로 규정한 것은 사업경영과 이를 위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sup>1)</sup>

### □ 국회 심의과정

- 위험한 작업과정을 하청, 도급, 파견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의 ‘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로도 불리며 이미 **20대 국회의 중요 개혁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sup>2)</sup>
-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군 사건 이후 국정감사의 주요안건으로 다뤄졌고, 관련 법안인 산안법 개정안도 26건(정부 개정안 포함) 발의됨
- 2016년과 2017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예방,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중대 재해’ 사례가 높다는 점이 반복해서 제기됨**(<표 1>참조).
- 하지만 원청(도급인)의 안전 및 사고책임성 강화, 도급의 제한, 노동자의 사업중단 권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 및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최근엔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sup>3)</sup> 논의 자체가 지연됨
- 정부의 전부 개정안이 발의와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고, 이러한 여론이 국회 입법을 강제

<표1> 2016~2017년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국정감사 주요 결과

2016년도	2017년도
<p><b>30분 배달제 규제</b></p> <p>▷ 배달업체의 30분 배달제 때문에 임시취업한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으므로, 30분 배달제 폐지 등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신분인 배달대행 업체 소속 청소년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등 사고로부터의 보호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조속히 마련할 것</p> <p>▷ 30분 배달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등 행정적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p> <p><b>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방안 마련</b></p> <p>▷ 하청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p> <p>▷ 중대재해 사망자수는 2014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하청근로자 사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원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고, 원청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적극 알려주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p> <p><b>공공기관 산재관리 강화</b></p> <p>▷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 산재발생보고지원하청 관계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무를 기재하도록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산재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p> <p><b>도급인가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b></p> <p>▷ 도급인가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도급인가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숫자에 비해 도급인가신청 사업장이 매우 적으므로 산재가 발생한 도급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급인가 미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도급인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p>	<p><b>크레인 산업재해 사고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b></p> <p>▷ 크레인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파악하고 아울러 적정 장비임대료와 적정 설치·해체비용, 적정 투입인원 등이 명시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급하고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안전교육 제공하며, 전문 신호수 자격제도 도입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p> <p>▷ 타워 크레인 설 해체 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산안법 제29조에 의거,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검찰의 소극적 수사지휘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검찰과 업무협의를 통해 산안법 29조 원청의 책임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p> <p><b>산업재해 사전예방 대책 마련</b></p> <p>▷ 최근 산업재해 증가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p> <p><b>KT서비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감독 실시</b></p> <p>▷ KT서비스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감독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할 것</p> <p><b>산재은폐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강구</b></p> <p>▷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p> <p><b>청년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b></p> <p>▷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산재 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p>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필자정리

## II. 우리나라 산재 실태

### □ 전체 재해율은 줄어 들고 있으나, 사망률은 2017년도 증가

○ 최근 5년 간 재해자수는 2013년도 91,824명에서 2017년도 89,848명으로 감소.

- 재해율(%)\*은 0.59에서 0.48로 감소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 비율. 재해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을 말함

- 사망만인율(‰)\*\*은 1.25에서 1.05로 감소했으나, 2017년은 전년도에서 비해 상승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표2>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 추이(명)

연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
2013	15,449,228	91,824	1,929	0.59	1.25
2014	17,062,308	90,909	1,850	0.53	1.08
2015	17,968,931	90,129	1,810	0.50	1.01
2016	18,431,716	90,656	1,777	0.49	0.96
2017	18,560,142	89,848	1,957	0.48	1.05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노동부(2018). 『2017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재해율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 상황

- 한국의 산업재해율(부상율)은 일본보다는 높으나 영국, 독일 등 유럽선진국보다 낮음

-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일본의 5배, 독일보다는 10배 높음.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산업재해가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표3> 국가별 산업재해율 비교(2016년 및 최근 년)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영국
부상만인율	48.4	181.2	195.2	300.3**	22.0**	131.4*	76.0*
사망만인율	1.05	0.1	0.2	0.82*	0.2	0.24*	0.8*

출처: 고용노동부(2018), 『2017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국제노동기구(ILO), ILOSTAT.

\*2015 \*\*2017.

주: 각국의 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표,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 등이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려움

### □ 고용규모에 따른 산재실태

○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게 집계

- 소규모 사업장, 즉 영세사업장일수록 안전 및 보건(건강)관리가 소홀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 2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의 64.77%, 전체 사망자의 35.12%를 차지하고 있음

<표4> 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비교(2017)

구분	총계	5인 미만	5~9	10~19	20~29	30~49	50~99	100 ~299	300 ~499	500 ~999	1,000인 이상
사업장수	2,507,364	1,802,961	362,850	183,805	62,490	47,312	28,155	15,628	2,331	1,232	600
근로자수	18,560,142	2,813,885	2,362,926	2,448,280	1,484,724	1,773,902	1,921,118	2,500,364	876,708	824,242	1,553,993
재해자수	89,848	29,597	15,037	13,555	7,043	7,294	6,066	5,408	1,624	1,521	2,703
재해율	0.48	1.05	0.64	0.55	0.47	0.41	0.32	0.22	0.19	0.18	0.17
분포(%)	100.00	32.94	16.74	15.09	7.84	8.12	6.75	6.02	1.81	1.69	3.01%
사망자수	1,957	416	223	244	115	150	190	245	106	177	91
사망 만인율	1.05	1.48	0.94	1.00	0.77	0.85	0.99	0.98	1.21	2.15	0.59
분포(%)	100.00	21.26	11.39	12.47	5.88	7.66	9.71	12.52	5.42	9.04	4.65

출처: 고용노동부(2018), 『2017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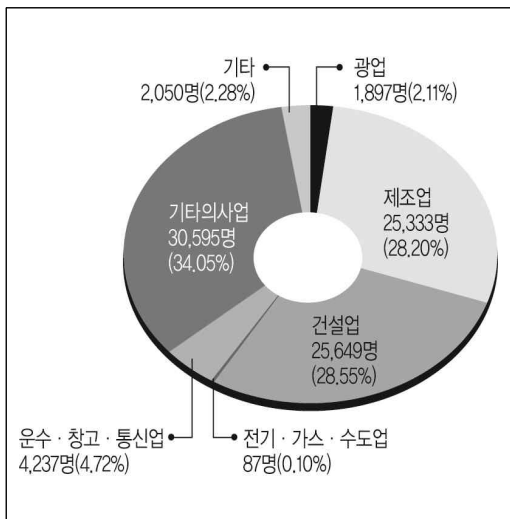
## □ 산업별 산업재해 실태(2017년)

○ 전체 산업재해 중 빈도순으로 보면, 기타의 사업\*, 건설업, 제조업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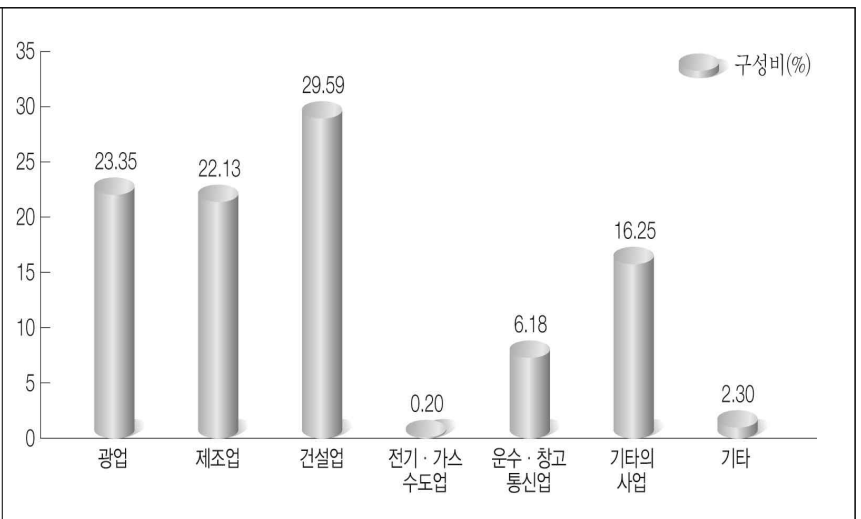
\* 기타의 사업은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산업재해 중 사망자의 비율은 건설업, 광업, 제조업 순

<그림1> 산업별 산업재해 분포도



<그림2>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도



출처: 고용노동부(2018), 『2017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 산업별 사망만인율은 광업이 408.07‰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어업 5.67‰, 임업 1.93‰, 건설업 1.90‰ 등의 순

## □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실태(2017년)

### ○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산업재해 비율이 높음

- 산업재해가 숙련도와 관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 개인의 안전의무 강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통계이기도 함

<표5>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분포

구분 \ 근속기간	총 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분류 불능
사 망	964 (100.00%)	615 (63.80%)	75 (7.78%)	79 (8.20%)	46 (4.77%)	31 (3.22%)	23 (2.39%)	49 (5.08%)	46 (4.77%)	0 (0.00%)
산업재해	80,665 (100.00%)	48,127 (59.66%)	8,057 (9.99%)	7,478 (9.27%)	3,960 (4.91%)	2,674 (3.31%)	1,914 (2.37%)	4,490 (5.57%)	3,897 (4.83%)	68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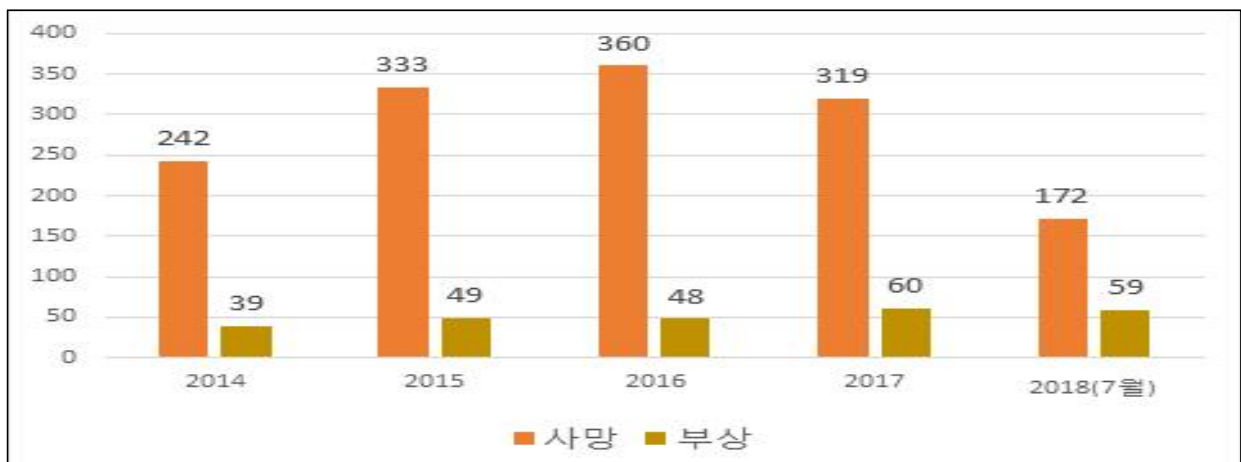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2018), 『2017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 □ 원청보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이 높음

### ○ 고용노동부의 기존 <산업재해 현황분석>에는 원청과 하청의 분리통계가 없었음

- 국정감사 자료제출이나,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 내용 중 하청노동자 사망·부상 현황만 전수조사한 자료 작성(<그림3>)
- 2011년~2015년 사이 국내 주요 30대 대기업에서 총 20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245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하청노동자가 212명(86.5%)에 달함<sup>4)</sup>
-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014년~2018년 8월 사이 산업재해로 하청노동자 1,426명 사망

<그림3> 최근 5년간 하청근로자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하청근로자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 매일노동뉴스 2018.12.17.

○ 원청과 하청노동자 재해율 비교

- 도급체계에서 위험한 일을 전담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의 실태는 원청과 하청의 재해율 비교에서 잘 드러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및 연구결과(<표6>)\*에 따르면, 원청과 상주하청(원청의 사업장에서 근무)의 재해율은 비슷했지만, 사망만인율은 6배, 사고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7배가 원청보다 하청노동자들에게 높게 발생

\*2018년 1월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표6>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비교

구분	재해율	사망만인율	사고 사망만인율
원청	0.36	0.53	0.25
상주 하청	0.35	3.11	1.77
비상주 하청	0.06	0.00	0.00

출처: 조운호 2017,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II』,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46.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실태조사<sup>5)</sup>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산재피해 경험(38%)이 정규직의 산재 경험(21%)보다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조선, 철강, 유통, 통신 등 5개 업종 대상 설문조사

## □ 산업재해의 은폐

○ 산안법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재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은폐 사례 적발 건수의 지속적 증가

<표7>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2011~2017)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적발건수	456	1,242	192	726	736	1,338	1,315

출처: 문진국 의원실,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질의서” 2016.10.13; 이용득 의원실, “은폐된 산재, 당국의 수수방관 속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2018.10.26

○ 산재은폐 원인

- 원청은 산재로 인한 보험금 인상 및 처벌 회피
-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도급계약 연장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협력업체가 산재건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줘요. 도급계약을 연장을 안해준다거나 도급계약에서 저점을 매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많이 은폐하는 거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에 따라) (임금의) 70%를 받잖아요. 그니까 엄청 심각한 산재가 아닌 이상은, 그냥 본인이 나와서 대충 일하든 병상으로 하든 대충 그렇게 되는 거고.”(면접자 3-E)<sup>6)</sup>

-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나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복잡한 산재처리 절차

### Ⅲ.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 □ 정부 전부개정안의 쟁점

쟁점	찬성	반대
법의 목적(대상)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제1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1인 수급인을 포함 앞으로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근로자를 보 호대상으로 확대하는 근거 조항	✓개념이 추상적. 법적 개념의 명 확해야 함.
중대재해 발생시 고 용노동부 장관의 작 업중지 조치(제55조)	✓요건과 절차, 해제 요건 등이 현행 법률보다 투명하고 명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해제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작업중지대상 불명확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남발우려 ✓복잡한 작업중지명령 해제절차 에 따른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제58조)	✓현행 조항도 도급금지가 원칙이 지만, 인가를 받으면 도급가능 ✓납, 수은, 카드늄, 등 유해·위험 물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는 정당	✓사내도급 금지는 과잉금지에 위 배 ✓(하)도급을 금지하는 국외내 입 법사례 없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	✓도급의 원칙은 수급인의 전문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	✓사업주의 사외업체 안전보건관 리 능력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 사내도급에 한정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범위 확대 (제63조)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입법대응 으로 산안법 전면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를 고려 하지 않고 무한 확장하는 것은 오 히려 근로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처벌 남발 등의 부작용우려
사업주 벌칙 강화(제 168조) 근로자 사망시 10년	✓현행 법률은 하청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의 책임은 안전조치 미 흡에 대해서만 부과	✓법위반의 직접행위자가 아닌 사 업주에게는 과잉처벌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제169조) 안전 및 보건조치 규정 위반시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중대재해에 대해 중간 및 하급관리자 책임으로 전가 ✓원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실제적이고 제도적인 예방노력이 강제될 것임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책 임(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함
법인벌금 강화 (제174조) 사망시 10억 이하,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시 1억원 이하	상동 ✓캐나다, 호주, 영국은 기업살인 법을 제정하여 기업법인, 최고책 임자 처벌을 강화	✓법인의 처벌근거는 법인 소속 종업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감 독과실 책임으로 직접 행위자의 처벌수준과 낮거나 동일해야 함

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18.12.21)에서 필  
자정리

## □ 산안법 전부개정안(국회합의안)의 주요 내용

###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
- 법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  
는 자(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
-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의 의무 적시

###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  
음을 명확히 규정. 이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  
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  
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  
록 함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등

-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MSDS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IV. 산안법 전부개정 의의와 향후 과제

### □ 사업주의 책임과 노동자권리 강화

#### ○ 사업주(기업) 및 원청에 대한 책임 강화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 확장: 22개 위험장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5년 이내 사망사고 중복발생시 가중처벌(하청노동자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 법인에 대한 상한 증액(1억원 → 10억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일시·간헐적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용)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물질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필요

####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고 등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분야의 산재예방조치 강화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여부 등 확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설치·해체작업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둠

#### ○ 산안법 보호대상의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배달종사자 등)로 넓힘

#### ○ 산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및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위험성 평가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 참여 명시
- 위험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도록 함

## □ 향후 과제

###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필요: 도급계약의 엄격한 제한

- 현행 도급계약의 문제점은 해당작업의 위험성을 넘어서, 업무의 전문성에 입각한 분업화가 아니라 비용절감의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는 것. 즉 이익은 독점하고 불이익은 회피하기 위한 목적. 실제 도급은 주로 단순인력을 활용한 인력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sup>7)</sup>
- 일례로 발전소의 경우,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처벌이외의 예방방안은 없는 상태
- 발전소 등의 공기업은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화(자회사 포함)<sup>8)</sup>, 건설업 등 민간기업은 산재시스템의 정비 및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및 산재예방 감독이 요구됨

### ○ 후속 시행령 마련(개정산안법은 2020년 1월부터 적용)

-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를 위한 장소지정,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 사항 등

### ○ 철저한 근로감독 및 안전보건감독의 시행

- 故김용균씨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관련, 태안 서부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에서 1029건의 산안법 위반사항 적발
- 전부 개정산안법이 실행되더라도 철저한 관련부처의 감독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의 예방을 담보할 수 없음
- (하청)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등 새로운 산안법 시행 이전이라도 산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련부처의 감독기능이 실시되어야 함

### ○ 기업과 사업주의 인식 변화: 기업의 사회적 의무

-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책임(보호의무)\*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에 대한 인권보장과 창의적 일터혁신의 관점에서 기업과 사업주는 자율성에 바탕한 사회적 의무를 지님
- \* 예를 들어 영국의 산안법은 사업장 안에 있는 다단계 하청 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모두에 대해서 포괄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구조<sup>9)</sup>
-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발본적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함

1) 노상현. 2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쟁점.”『안전보건 연구동향』. 9월호(통권37호), 9.

2)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정기토론회. 2016.『‘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11/28).

3) 한겨레. 2018.12.30.

4) 문진국 의원실,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질의서” 2016.10.13.

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8.『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64.

6) 위 자료, 142.

7) 위의 자료, 35.

8)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및 고김용균씨 유족 및 시민대책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발전소 연료·환경설비분야는 정규직으로 전환(공공기관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전문성 강화 및 정규직화 여부를 노·사·전(전문가)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함.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 이상 고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2019.2.6.)

9) 권혁. 2016.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정기토론회 자료집』(11/28), 30.